

일반논문

**사회운동이 근현대 지역연구에 미친 영향과 한계 :
‘현사련’의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정호기 (원광대)

1980년대 한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격동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시대상의 주요한 힘은 사회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지식인도 학술활동을 근간으로 사회운동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이 글은 사회운동이 지식인의 학술활동에 미친 영향과 성과 그리고 한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전남지역과 광주시이며, 연구대상은 현사련의 학술활동이다.

현사련은 5·18의 유산으로 광주시에 설립된 비제도권 학술단체이다. 현사련은 5·18 조사·연구를 일차적인 과제로 했고, 5·18 조사·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근현대 지역연구를 병행했다. 하지만 근현대 지역연구는 곧 독립된 주제가 되었다. 근현대 지역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사련 학술활동의 전부가 되었으며, 다양한 성과를 산출했다. 성과는 전남지역 해방 전후사의 재조명과 복원, 근현대 지역사회운동사에 관한 첫 연구서 발간, 인물에 의거한 근현대 전남지역 재구성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현사련은 설립 당시의 구조적인 문제, 지역에 위치한 비제도권 학술단체가 갖는 한계와 과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주제어 : 근현대 지역연구, 사회운동, 5·18민주화운동, 지식인의 사회참여, 현사련

1. 머리말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했던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동력은 사회운동이었다. 18여 년을 통치했던 박정희 시대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사업임(NRF-2017S1A6A3A02079082)

가 막을 내리자, 사회 전 분야에서 사회운동이 분출했다. 이 시기의 사회운동 의제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 요건에 관한 것이었다(허 은 2010). 유신헌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유신헌법 이전의 헌법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의 봄'은 5월 17일 자정을 기해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면서 일순간 위축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을 계기로 좌절되었다. 1981년 1월 24일 계엄령의 해제는 신군부의 권력 장악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1983년부터 유화국면이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공권력에 의거한 권위주의 통치는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또한 1987년 1월 박종철의 죽음에서 6·10민주항쟁(이하 6·10)까지, 이어서 12월 대통령선거까지 한국사회는 격랑이었고 사회운동의 성장기였다.

1980년대의 사회운동들에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특별했던 사건은 5·18과 6·10이었다. 5·18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198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를 고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회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급진화한 원인을 설명할 방법이 묘연하다(최정은 1999, 19). 대비적으로 6·10은 헌법 개정을 쟁점으로 전개된 국가권력에 대한 집합적 저항이었다(정근식 2017, 490). 두 사건은 국가권력의 교체와 민주화를 요체로 했지만, 사건의 촉발과 전개 양상 그리고 결과에서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사회운동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지식인 혹은 지식인 집단도 사회운동의 주요 주체였다. 지식인은 지식이라는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식인에는 교육자, 법조인, 예술인, 문학인, 출판인, 언론인, 전문사무직 등이 포함된다(유초하 1989, 18). 지식인과 지식인 집단은 전문성에 의거해 사회운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했는데, 사회적 영향력에서 보면 대학에 소속된 교육자, 즉 교수 혹은 연구자의 역할이 단연 돋보인다. 그러므로 이 글은 교수 혹은 연구자의 사회참여³⁾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 글은 사회운동이 지식인의 학술활동에 미친 영향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주목할 것인데, 비제도권 학술단체의 구성과 문제의식의 형성 그리고 연구의 주제 및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1980년대 사회운동과 지식인의 사회참여가 잘 확인되는 전남지역이다. 사회운동에서 전남지역이 갖는 위상은 5·18의 발원지이며, 이를 계기로 민주화의 성지라는 장소성과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정근식 1996, 137-143). 전남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중심이 되는 공간은 광주시이다. 이곳에 주요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어 지식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 광주시⁴⁾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식인 모임들이 등장했다. 이를테면, 1987년 4월에 '농민문제연구소'가, 1987년 9월에 '전남사회문제연구소'가, 1988년 5월에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이하 현사련)⁵⁾가, 그리고 1988년 10월에 '전남사회연구회'가 설립되었다.⁶⁾ 이 단체들은 나름의 영역과 활동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특성상 구성원과 활동이 중첩되었다. 1987년에 창립되었던 연구소들은 오래전 해산했고, 전남사회연구회는 2009년 광주연구

-
- 3) 김수영은 『사상계』 1968년 1월호에 “지식인의 사회참여 - 일간신문의 최근 논설을 중심으로”를 게재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통제되던 시기에 지식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1980년대에 들어 ‘학술운동’으로 수렴된 측면이 있으나, 의미와 포괄성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 4) 이 글에서 전남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포괄한다. 1986년 전라남도에서 광주직할시가 분리되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여러 단체들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분리 이후에도 전남지역이라는 명칭이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두 지역을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 5) 1996년부터 현사련은 주요 학술활동 주제를 기준으로 전남대 5·18연구소와 ‘한국현대사회연구소’로 분리되었다. ‘한국현대사회연구소’라는 단체명은 법인으로 등록하면서부터 사용했는데, 이전과 같이 ‘현사련’으로 약칭한다.
 - 6) 윤한봉 등을 중심으로 1979년에 설립된 ‘현대문화연구소’는 학술활동을 내세운 사실상 사회운동단체였는데, 5·18을 겪으면서 해산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전남사회연구회’와 교류를 했던 대구의 ‘지방사회연구회’에 대해서는 이재성(2005)을 참조하기 바란다.

소로 수렴되었다. 그래서 이 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사련의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현사련은 출범할 때부터 전국적인 위상을 갖는 학술단체를 지향했으며, 지역사회의 시급한 현안을 조사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현사련은 학술활동의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책으로 출간했으며,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등 차별화된 경로를 걸었다. 현사련의 학술활동을 연구소 명의로 진행한 연구, 회원의 개인 연구,⁷⁾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연구자의 연구 등으로 구분한다면, 이 글은 현사련 명의로 진행되었던 연구에 한정한다. 현사련의 학술활동은 '5·18 조사 연구'와 '근현대 지역연구'로 대별되는데,⁸⁾ 이 글은 '근현대 지역연구'에 주목한다. 이 글의 주요 연구방법은 현사련의 학술활동에서 생산된 각종 문자 기록들에 근거한 텍스트 분석이며, 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은 참여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규명한다.

2. 연구의 배경 : 지식인의 사회참여와 근현대 지역연구

1) 1980년 전후 전남지역 지식인의 사회참여

전남지역에서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기까지 계속해서 확인된다. 지식인이 이 시기의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했거나 관련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사건들에서 특별한 역할이 확인되며,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사회운동의 여러 주체들과 교감하고 있었다. 또한 지식인은 학연과 지연 그리고 전공과 활동 방

7) 안종철(1991), Meade, E.(1951; 안종철 역 1993), 이종범(1993) 등이 있다.

8) 현사련의 5·18 조사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이종범(2004), 최정기(2018)를 참조하기 바란다.

식 등에 따라 폭넓게 인적관계 혹은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용이한 집단이어서 주요 활동공간이 전남지역이라고 해도 전국적인 관계망과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다음 세 가지 사건들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첫째, 1978년에 발생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해 3월 초 백낙청 교수(서울대 해직)와 송기숙 교수(전남대) 등의 만남에서 발단했다. 이들은 서울 소재 대학 교수 70여 명과 전남대 교수들이 학원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성명서에 서명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서울 일부 교수들의 요구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해직교수협의회”⁹⁾ 회장이었던 성래운 교수(연세대 해직)가 외국 언론 기자들에게 전남대 교수 11명¹⁰⁾이 서명한 「우리의 교육지표」를 전달했고, 6월 27일에 기사화되었다(신일섭 2009, 135-137). 서명 교수들은 중앙정보부 광주지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송기숙 교수를 제외하고는 이튿날 석방되었다. 교수들은 7월 초 사표를 제출했고, 직위 해제되었다. 이는 재야와 청년 그리고 전남대·조선대 학생들의 항거로 이어졌다. 결국 송기숙 교수는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학생 등 항거 행위자 20명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 및 제적되었다(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 236-243).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은 박정희 시대 말기에 친분이 있던 서울과 광주 소재 대학의 해직 및 재직 교수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행동에 옮길 계획을 구체적으로

9) “해직교수협의회”는 1978년 3월 24일 「언론계 여러분께 보내는 공개장」을 통해 가시화되었고, 4월 13일 「동료교수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하면서 공식 발족했다.

10) 「우리의 교육지표」에 서명한 교수들은 김두진, 김정수, 김현곤, 명노근, 배영남, 송기숙, 오승기, 안진오, 이방기, 이석연, 이홍길이었다.

수립하고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재야와 학생이 중심이 된 다른 항거들을 촉발시켰으며, 교수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기반이 학생과 법조인, 종교인 등 지식인 집단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5·18에서 지식인의 참여와 역할이다. 5·18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전남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노영기 2013, 349-356). 여기에는 야당 정치인 김대중의 존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5·18은 전남지역을 다른 지역들과 구분하게 하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고, 유래가 없는 양상으로 전개된 사회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신군부가 오래 전부터 준비한 집권 계획의 일환으로 5·18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연속되었던 항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5·18에서 지식인의 참여와 역할에는 1970년대 형성되었던 사회운동의 네트워크가 작동했다(최정기 2004, 8). 항쟁의 중심에 합류한 지식인도 있었는데, 교수들은 일정하게 거리를 두었다. 교수들은 재야인사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 참여했다. 5·18 수습위원들의 명단에서 확인되는 교수들은 오병문, 송기숙, 명노근 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기숙과 명노근은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의 관련자이다. 다른 수습 위원들에게도 이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1970년대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지식인도 여럿이었다. 교수들은 계엄군의 재진입이 임박하자 서울로 피신했는데,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등으로 인연이 있던 교수들도 동행했다. 이들은 기존에 형성된 관계망, 즉 백낙청 교수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송기숙 1990). 한편 김동원과 김수남 교수는 수습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5·18 관련자로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고, 해직되었다.

5·18과 연관을 지어 살펴볼 다른 사안은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

건이다. 계엄사령부는 1980년 7월 4일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이거나 지식인이었다. 그 가운데 재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교수들인 이문영, 장을병, 김동길, 이영희, 백낙청, 이효재, 한완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등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직되었다.

셋째, 1987년 6·10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지식인의 시국성명 발표이다. 이 시기 시국성명 참여는 긴급조치와 계엄령 시기 정도는 아닐지라도 탄압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던 행위였다. 그해 5월에 들어 각 부문별로 시국성명이 발표되었는데, 대학가에서도 학교별로 교수의 시국성명이 잇따랐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시국성명은 6·10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사건적 계기들 가운데 하나였고, 호소력이 큰 정당화 기제로 작용했다. 전남지역에서도 교수들이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과거 사회운동으로 수난을 겪은 교수들 대부분이 동참했다.

2) 지식인의 사회참여와 근현대 연구

1980년대는 사회과학의 전성기였다. 이때의 사회과학은 제도권의 학문분류 체계를 넘어 인문학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등을 망라하고 있었다. 이 시기 서울에서는 연구소 혹은 연구회 등으로 호명되는 단체들이 속속 창립되었으며, 지식인의 사회참여 혹은 학술운동을 표방했다(김동춘 1988).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1960~1970년대에 거론되었지만, 1980년대 들어서 체계화·조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들은

11) 1984년에 설립된 망원한국사연구실과 상도연구실(한국산업사회연구회 전신)을 비롯해 역사문제연구소(1986. 2. 21. 창립), 한국근대사연구회(1987. 창립), 한국역사연구회(1988. 9. 3. 창립),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1988. 11. 20. 창립) 등이 대표

엄혹한 정세에서도 논문과 책 그리고 자료집 등을 생산했고, 토론 강의·강연 등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근현대 연구는 지식인의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술활동의 한 갈래였다. 근현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오랜 기간 규제대상이었다.¹²⁾ 근현대 연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었다기보다 관점이나 주제 그리고 소재의 선정에서 경도되었거나, 제약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연구가 자유로웠던 영역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의 양상과 실태, 현재의 통치세력과 이념적 지향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던 독립운동 등 이른바 민족의식과 정체성에 관한 분야였다(권태억 1993). 즉 근현대 연구는 집권세력과 관점을 공유하거나 정책적 지향을 강화 및 활용이 가능한 주제와 소재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근현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제한되었던 것은 은폐, 왜곡, 채색한 진상들이 가득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인 자유, 인권, 정의 등을 유린하고 억압한 행위가 드러나고 역사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만, 근현대를 구성하는 많은 사건들은 여전히 유효한 사법적 처벌대상이었다. 그러므로 군부와 권위주의 체제가 통치하던 시기의 근현대 연구는 위험지대였다.

이러한 현상에 균열이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였다. 이즈음부터 근현대 연구를 통치학 혹은 정책학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실천이 집단화되었다. 이는 주로 비제도권에서 전개되었는데,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출판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1979년 10월 15일 5,000부가 발간되었다. 당국이 500여 권을 압수했지

적인 사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 은(2003, 37-39) 참조하기 바란다

12) “방치된 우리의 현대사.” 『경향신문』. 1994. 3. 28.

만, 나머지는 2주 만에 판매되었다.¹³⁾ 이는 근현대 연구가 왜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가를, 학계와 학생 및 시민의 요구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근현대 연구가 급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1983년부터 형성된 유화국면과 사회운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근현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확산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즉 사회운동, 사회과학 논쟁, 근현대 연구 등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했고, 점차 제도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근현대 연구들은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이는 한국 사회가 겪던 시대상과 관련이 깊었다. 1980년대 전반기에 발간되었던 『한국사회연구』(1983년)와 『한국현대사 I』(1985년) 등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보다 학술적인 경향을 띠었으나, 문제의식과 성격에서는 유사했다. 또한 이 무렵부터 단행본과 논문의 발표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¹⁴⁾ 각종 “영인” 자료의 출간이 크게 기여했다.

근현대는 현재와 가까운 시기여서 공감대가 넓지만, 그만큼 견해의 차이가 크고 논쟁이 첨예하게 전개될 여지가 많은 주제이기도 했다. 근현대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관련자가 생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또한 자료의 생산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었다. 역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분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근래에 널리 권장되는 ‘다 학제 간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했다. 여기에는 ‘1차 사료’를 중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 세대 이전시기의 연구에 주력했던 역사학이 미친 영향도 작용했다. 그래서 광의의 인문사회 연구

13) “해방 전후사의 인식” 다시 나온다.” 『조선일보』, 2004. 5. 28.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제2권은 유화국면이 조성된 뒤인 1985년에, 마지막 제6권은 1989년에 발간되었다.

14) 전남지역으로 한정하면, 김창진(1986; 1987)과 황남준(1987), 김점숙(1990) 등이 이 무렵에 발표되었다.

자들의 공동 작업이 가능할 수 있었고, 시너지 효과가 상당했다.

이 무렵 근현대 연구의 흐름을 전남지역으로 한정하여 고찰하면, 이종범(1993)과 김동수(1998)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들 연구는 전남지방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학문 분야, 시대와 주제별 그리고 시군 단위별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과 변화를 보여 준다. 이들 연구는 근현대 전남지역 연구사 전반에 관한 현황을 개관하고,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3) 지역연구의 인식과 관점의 변화

근현대 연구와 지역연구는 시차를 두고 발전했다. 근현대 연구의 흐름이 선행되고, 지역연구가 후속되었다. 근현대 연구는 서울 혹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주요 사건들이나 현상에 대한 관심이 우선시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혹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들은 전국적인 흐름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그나마 몇몇 사례에 국한해 다루어졌다.

그렇다고 지역연구가 방치된 것은 아니다. '향토사' 혹은 '지방사' 연구가 그 나름의 대상과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되고 있었다(고석규 2008). 이러한 연구는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국문학 분야에서 선도했는데, 일제강점기 이후를 다룬 경우는 드물었다. 지역연구는 지역에 터전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제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향토사는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수준의 차이가 상당했다(고석규 1998, 18-19; 이규태 2007, 178).

그러면서 향토사와 연구 대상을 공유하지만, 지방사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지방사는 '중앙사'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중앙과 독립된 나름의 역사와 정체

성 그리고 고유함이 있음을 전제로 했다. 그리하여 지방사는 향토사에서 한 단계 발전한 관점으로 이해되었고, 점차 선호되었다. 여기에는 전체사의 관점으로는 지역 전반을 적절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서울 혹은 중앙 중심의 관점으로는 '지방' 또는 '지역'의 역사, 문화, 특성을 제대로 재구성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했다(이해준 2001, 198-199). 전국 혹은 중앙과 대비를 이룬 관점들은 상당 기간 경합하며 혼용되었는데, 1990년대에는 지방사라는 관점이 우세했다(김동수 1998, 41-42). 하지만 지방사에 대한 의미 부여와 애착에도 불구하고, 사회학, 지리학, 공간학, 도시학 등 사회과학의 분과들에서는 '지역'과 '지역학'이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¹⁵⁾

'지방'과 '지역'의 개념 및 의미를 고찰하면서 보다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논의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지역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지지를 받고 있지만(허영란 2017), 명쾌하게 정리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이규태 2007; 양정필 2007, 17). 그리고 지방과 지역 연구의 시기를 근현대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일정한 주제와 분야에 집중 및 편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동수 1998, 47).

지방 혹은 지역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크게 활성화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나는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역성을 강화하려는 요구와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사 혹은 지역사에 대한 관심의 형성과 연구가 사회운동의 발전 및 고양과 흐름을 같이하며 성장했다는 것이다(양정필 2007, 12-13; 허영란 2017, 348). 그러므로 근현대 연구와 지방 혹은 지역 연구가 중첩되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저변에는 사회운동이 자리하고 있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식인의 사회참여가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¹⁵⁾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편(1996)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3. 비제도권 학술단체의 등장과 지역연구의 문제의식 형성 및 확장

1) 비제도권 학술단체의 등장 : 현사련의 설립과 특성

현사련은 5·18 제8주기 추모기간이던 1988년 5월 23일 한양대 이영희 교수를 이사장으로 설립되었다. 현사련의 설립을 주도했던 것은 송기숙 교수였다. 현사련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구조와 요건을 갖춘 체제로 구성되었다. <표 1>과 같이, 현사련 이사진은 15명이었는데, ⅔ 이상이 전남지역 외부의 대학 등에 재직 중인 교수 혹은 연구자였다. 이사진의 소속 지역을 보면, 서울(6명), 경기(1명), 전북(1명), 부산(1명), 경북(1명), 전남(5명)이었다. 충청, 강원, 경남, 제주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거의 전국적인 인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현사련 초대 이사진과 주요 이력

이 사 진	1970년대	1980년대
이영희	1975년 『동아일보』 자유언론운동 지지 광고, 반공법 위반 투옥, 해직	1980년 '지식인 134인 선언'에 참여, 김대중 내란음모, 해직, 1987년 시국성명, 국군보안사령부 사찰대상
송기숙	우리의 교육지표, 해직	5·18 관련 수감, 해직, '학원안정법' 반대 성명, 1987년 시국성명, 민교협 공동의장, 국군보안사령부 사찰대상
강만길	행동하는 지성인, 1974년 국정 국사교과서 비판	1980년 '학원사태에 대한 성명' 등에 참여, 김대중 내란음모, 해직, 1987년 시국성명과 농성
김동원		5·18 관련 고문, 해직, 1987년 시국성명
김수남		5·18 관련 고문, 해직
김수행		1986년 시국성명, 한신대 민주화운동 관련 사직, 국군보안사령부 사찰대상
김의수		1987년 시국성명, 민교협 공동의장

김진균	『산동아』(1977. 4.) 참여의식 강한 4·19세대 선정	1980년 '학원사태에 대한 성명' 등에 참여하여 해직, 민교협 공동의장, 국군보안사령부 사찰대상
명노근	우리의 교육지표, 해직	5·18 관련 수감, 해직, '학원안정법' 반대 성명, 1987년 시국성명, 국군보안사령부 사찰대상
문병란	고교 교사 시절 해직	5·18 관련 수배, 수감, 1987년 시국성명
박현채	민주화운동으로 복역, 크리스찬이카데미	재야 사회과학자, "민족경제론" 주창, 국군보안사령부 사찰대상
백낙청	명동31구국선언, 해직	김대중 내란음모, 해직, 1985년 문학인선언, 국군보안사령부 사찰대상
이수인		1980년 '학원사태에 대한 성명' 등에 참여하여 해직, 해직교수협의회 회장, '학원안정법' 반대 성명, 1987년 시국성명, 민교협 창립, 국군보안사령부 사찰대상
장을병	1975년 「동아일보」 자유언론운동 지지 광고	1980년 '학원사태에 대한 성명' 등에 참여하여 해직, 김대중 내란음모, '학원안정법' 반대 성명, 국군보안사령부 사찰대상
황한식	크리스찬이카데미	김대중 내란음모, 『해방 전후사의 인식 2』 저자, 1987년 시국성명

* 자료 : 인터넷 포털 인물 검색, 신문 검색, 허 은(2003, 35) 등을 참조하여
구성.

이사진의 공통분모는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다수는 박정희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해직되어 강단을 강제로 떠나야 했다. 이들은 일찍이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다양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이사진에 포함되었던 것은 이러한 특성의 일면이다. 이들은 1980년대에는 더욱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했으며, 서울 등지에서 비제도권 학술단체의 설립을 주도했거나 중요한 역할의 담당자였다.¹⁶⁾ 이들의 사회참여는 현사련이 설립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는 12명의 이사가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시국사건들에 연루되어 해직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고,

16) "80년대를 되돌아본다 - 문화계 얼굴들." 『한겨레신문』, 1989. 12. 22.

6·10 국면에서 시국성명 등에 참여했으며, 9명이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대상자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사진은 “해직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¹⁷⁾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므로 이들이 현사련 설립에 선뜻 동참했던 것은 시국에 대한 인식과 지식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학술활동의 방향과 과제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송기숙 소장이 개소 인사에서 밝혔듯이, 현사련의 창립은 교수로서의 나태함, 지나친 정치 우위적 태도와 정치 현실에 매몰, 5·18을 계기로 획득한 명망가로서의 자만심 등을 반성하고, ‘교수 본래의 입장에서 사회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한국현대사료연구소 1988. 6. 15, 5-6).¹⁸⁾

현사련의 설립 목적과 목표 그리고 연구 주제와 방법은 아래의 ‘설립취지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설립취지문은 성명서와 유사했는데, 학술활동을 통해 지식인으로서 사회참여를 하겠다는 포부가 명시되었다. 또한 호남지역 근현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구전사료’를 중심으로 사료를 수집·집성하여 제공하고 연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현사련이 주목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민중’인데, 가해자의 시각에서 왜곡된 자료와 제대로 알아낼 길이 없는 민중의 실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성할 것임을 적시했다.

민중의 이런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

17) 민교협은 1987년 6월 26일 전국 30개 대학 교수 70여 명이 참여하여 창립하기로 했으나, 당국의 제지로 7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28개 대학 80명이 참석했고, 30개 대학 443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언론에서는 민교협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장을병과 송기숙 교수를 언급했으며, 출범식 참석자 명단에서 현사련 이사진 다수가 확인된다.

18) 현사련의 실제 활동과 설립취지문 및 개소 인사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표방한 것은 신선하고 도전적이며 진보적이라고 평가될 만했다. 소장 이외의 이사진 가운데 현사련 명의를 사용한 경우는 드물지만, 이들이 이사진에 참여했던 여운은 오랫동안 남았다.

한 학문적 연구는 너무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들이 어떻게 싸워왔고 그 정신이 무엇이었던가 그 일차적 사실의 정리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

특히 호남지방은 근현대사에서 민족의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던 곳이며 또 그 모순이 거의 민중에게 전가되므로써 이 지방 사람들은 그만큼 비참하게 고통을 당해왔고, 또 그만큼 치열하게 저항을 해왔다. ……

이에 우리들은 민중사, 아니 한국의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성립시켜야겠다는 사명감을 뒤늦게나마 통감하고 그 기초 작업으로 일정한 학술적 방법에 따라 구전사료를 중심으로 널리 사료를 수집·집성하여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자 이 연구소를 개설하는 바이다.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88. 6. 15, 2)

2) 지역연구의 문제의식 형성과 확장

현사련의 학술활동은 근현대 지역을 배경으로 전개된 민중 중심의 사건에 관한 사료의 수집과 연구에 있었다. 설립취지문에서 밝혔듯이, 이들 사건은 '5·18광주민중항쟁, 광주학생사건, 소작쟁의, 한말 의병전쟁, 갑오농민전쟁'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과제는 5·18의 사료 수집이었다. 현사련을 설립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5·18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사련이 5·18의 사료 수집에 집중했던 현실적인 이유는 5·18의 현대사적 의의를 연구하고 정립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가해자 측인 정부 당국의 일방적 발표와 피해자의 체험적 증언만으로는 5·18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료의 객관화'와 '공식화'에 의한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¹⁹⁾

19) "광주항쟁 현대사적 의의 학술연구 시작." 『한겨레』, 1988. 5. 21.

5.18이 발생한 지 불과 8년이어서 참여자와 피해자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매우 조심스러웠다. 5.18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전남지역의 뜨거운 현안이었고, 절실한 과제였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5.18을 '민주화의 일환'이라고 재규정했지만, 가해자가 집권하고 있던 시국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전남사회문제연구소를 비롯해 지역 내외의 여러 단체들도 5.18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활동했는데,²⁰⁾ 사회운동단체의 색채가 짙었다.

중장기적인 학술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현사건의 지향은 근현대의 올바른 조명이었다. 이를 통해 '민족의 비원인 통일 논의의 보다 확고한 역사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근현대 연구의 일부 분으로 먼저 5.18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현사건을 설립 하면서 밝혔던 연구 대상들은 5.18 조사 연구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실로 중대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5.18을 하나의 사건으로 고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5.18은 적어도 미군정시기와 정부의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형성 및 고착화되었던 분단 반공체제, 이승만을 걸쳐 박정희 정부시대까지 지속되었던 권위주의적 독재체제, 불균등 경제발전과 지역주의 담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의거한 지배 방식과 통치체제에 대한 민중의 항거 등을 이해하고 고려할 때 비로소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교화하기 위해 지역의 근현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활동방향이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첫째는 조사원 교육, 둘째는 연구위원 간담회, 셋째는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를 언론매체와 논

²⁰⁾ 전남사회문제연구소가 1988년 4월에 발간한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집』이 대표적이다.

문으로 발표하는 것이었다. 조사원 교육은 전문성 배양과 인식의 균질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선배 연구자가 먼저 발표를 하고,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면, 이 계획은 반년을 넘기지 못했다.²¹⁾ 반면 연구위원 간담회는 책과 논문의 탐독,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해석과 활용 등으로 주제와 방법을 바꿔가며 지속되었다.

근현대 지역연구와 학술활동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2월 17일까지 『광주일보』에 “광주 전남지역의 현대사 재조명”을 연재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1990년에 『역사와 현장 1』이라는 부정기 간행물을, 1992년에 『전남 사회운동사 연구』라는 단행본을 발간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1993년 6월부터 『무등일보』에 근현대 지역 인물의 일대기를 연재하고, 이를 수정하고 분류하여 1995년 2월에 2권의 단행본(『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 『근현대의 형성과 사회운동』)을 발간한 것이었다.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근현대 지역연구는 문제의식의 형성과 주어진 과제에 따라 역행적으로 혹은 혼합적으로 진행되었다.

4. 근현대 전남지역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근현대 전남지역 연구의 성과

(1) 전남지역 해방 전후사의 재조명과 복원

21) 현사련은 약 40회의 ‘조사원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10회만 이루어졌고 발표자와 제 목도 변경되었다. 제10차 세미나는 1988년 9월 20일에 실시되었는데, 정해구가 ‘해방 3년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강의했다.

근현대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미군정 3년이였다.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와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 시기에 분단이 구체화되고 착되었고, 이때 형성되었던 통치체제가 1980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38선 이남에서만 정부를 수립해야 했던 과정과 결과는 1980년과 그 이후의 시기를 규정했던 가장 중요한 구조였다.

전남지역에서는 민주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신문사들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근현대를 기획 주제로 삼았다. 현사련은 기존의 언론사였던 「광주일보」와 “현대사 재조명”을 연재했다. 연재는 매달 4회 내외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다소 유동적이었다. 집필자는 전남대와 조선대에 재직한 소장 교수와 연구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제1회에서만 명시되었고, 제2회부터는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로 표기되었다. 이들의 전공은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으로 다양했다.

〈표 2〉 「광주일보」 “현대사 재조명”의 연재 회차별 제목

연재회차	제목	연재회차	제목
1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과제	2	미·소의 분할 점령
3	미군정 하의 농민운동	4	귀속 재산의 처리
5	민중항쟁	6	해방 당시 광주 전남
7	건준의 조직과 활동	8	건준의 인민위 조직의 개편
9	인민위의 활동	10	미군의 전남 진주
11	광양지역 인민위	12	인민위 파괴공작(나주군)
13	신탁통치	14	민전의 결성
15	3·1절 행사와 일중사건	16	이승만의 남선순방
17	해방 1주년 기념식	18	10월항쟁과 전남지역
19	3·22총파업	20	4·7메이데이 투쟁
21	단선 단정 반대투쟁	22	48년 2·7구국투쟁

23	5·10단선저지 투쟁	24	여순사건
25	부분운동에 들어가며	26	청년학생운동 I
27	청년학생운동Ⅱ	28	청년학생운동Ⅲ
29	청년학생운동Ⅳ	30	청년학생운동Ⅴ
31	농민운동 I	32	농민운동Ⅱ
33	농민운동Ⅲ	34	농민운동Ⅳ
35	귀속재산처리 I	36	귀속재산처리Ⅱ
37	귀속재산처리Ⅲ	38	노동운동 I
39	노동운동Ⅱ	40	노동운동Ⅲ
41	노동운동Ⅳ	42	노동운동Ⅴ
43	노동운동Ⅵ	44	노동운동Ⅶ
45	노동운동Ⅷ	46	노동운동Ⅸ
47	정당·사회단체 I	48	정당·사회단체Ⅱ
49	정당·사회단체Ⅲ	50	정당·사회단체Ⅳ
51	여성운동 I	52	여성운동Ⅱ
53	문예운동 I	54	문예운동Ⅱ
55	연재를 마치며	56	성과와 과제 - 좌담

이 연재는 전남지역 근현대를 새로운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처음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군정 시기 전남지역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사건들을 어느 정도 복원하게 되었다. <표 2>와 같이, 연재의 주제는 두 가지 계열로 배치되었다. 첫 번째는 미군정 시기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에 전남지역의 주요 국면과 사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제별 연재는 해방 전후사에 대한 인식과 과제를 5회에 걸쳐 정리하고, 이어서 시간 순으로 19회 주제들을 정리했다.

두 번째는 부문별 상황을 청년학생, 농민, 귀속재산처리, 노동운동, 정당·사회단체, 여성, 문예운동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했다. 부문별 상황은 모두 30회에 걸쳐 다루어졌는데, 사회운동의 관점과 맥락에서 구성

되었다. 부문별 분류에서 귀속재산처리가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자 사회운동의 의제였다. 귀속재산처리를 둘러싸고 미군정 및 통치체제와 민중의 갈등과 대립이 격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3회에 걸쳐 연재했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들은 네 가지 유형이었다. 첫째, 미군정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는 경험과 기억이 남아있는 인물에 대한 면담 자료였다. 이는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었다. 그런데 필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당시의 시대상과 주요 사건 그리고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흐름을 증언해줄 인물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미군정과 우익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은 8년의 격동기에 대부분 유명을 달리했고, 생존자들은 침묵했다. 6·10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었다고는 하나, 생존자들은 이념과 전쟁의 톱질로 인한 상흔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우익의 입장을 취했던 인물들도 면담을 회피하거나, 증언을 주저했다. 자신들의 행위를 반추하여 떳떳하게 증언하기에는 불편하고 곤란한 지점들이 많았던 것이다.

둘째, 각종 신문들의 기사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탐색한 신문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중앙지를 비롯해 오래 전 폐간되었던 「해방일보」와 「조선인민보」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 신문에는 전남지역에 관한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한국전쟁 이전의 기록은 「광주민보」, 「동광신문」, 「호남신문」 등에서, 이후의 기록은 「광주일보」와 「전남일보」 등을 검색했다. 이 자료들은 몇 가지 경로로 수집되었다. 한국전쟁 이전 시기에 발행된 신문은 고려대의 현대사연구팀(정해구, 김창진, 박명림 등)과 역사문제연구소가 수집한 것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신문들을 활용해 보완했다. 「광주일보」와 「전남일보」는 전남대 중앙도서관을 활용했다.²²⁾

셋째, 각종 영인 자료의 확보였다. 현사련은 계약금과 자료 수집비 대부분을 근현대 관련 영인 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²³⁾ 그리하여 『미군정 정보고서』, 『한국현대사사료 총서』, 『자료대한민국사』 등을 확보했으며, 서울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서 『동아일보 색인집』 등을 구입했다.²⁴⁾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은 당시 전남지역 비제도권 민간연구소로서는 최고 수준이었다.

넷째, 전남지역에서 발간한 각종 지방지의 수집이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도지, 시사, 군지, 군사, 향토지 등 다양하게 명명된 지방지들이 발간되고 있었는데, 일부는 계림동 헌책방 거리에서 구매하고, 일부는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집했다.

(2) 근현대 지역사회운동사에 관한 첫 연구서 발간

현사련이 근현대를 연구하면서 갖게 주된 고민은 전국적인 흐름과 지역의 흐름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상호성과 지역성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에 관한 고민은 일본에서 선행되었고, 한국에서는 1992년경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고석규 1998, 15), 현사련도 비슷한 시기에 이들 개념 정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²⁵⁾ 특히 전국에서 전남지역의 위상과 특성 그리고 다른 지역들과의 관계, 전남지역 내부에서의 차이 등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는 일본, 중국, 미국, 소련 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연구 범위와 영역 그

22) 신문 자료의 수집과 탐색은 최정기 면담(2018. 5. 13).

23) 최정기 면담(2018. 5. 13).

24) 안종철 면담(2018. 5. 2).

25) 1988년 9월경 목포대 이해준 교수를 초청하여 “향토사, 민중사, 민중생활사: 연구방법과 문헌조사 방법론”에 관한 특강을 했다(『송기숙 노트』, 31쪽). 이에 관한 고민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리고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현사련이 근현대 전남지역에 관한 글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90년이었던다. 1989년 개최했던 '5·18광주민중항쟁 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글과 토론을 모은 부정기간행물 『역사와 현장 1』을 발간했는데, 여기에 '특별기획'으로 전남지역 현대사에 관한 글 3편²⁶⁾과 "전남사회운동협의회"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었다. 그런데 이 글들은 기획으로 묶였으나 연관성이 낮았고, 『역사와 현장』은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사련의 현실과 연구 주제 및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현사련의 설립목적에 적절하게 추구할 방안이 '지역의 사회운동사' 연구였다. 이 주제는 연구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전체운동과 지역사회의 운동이 갖는 특성을 조화롭게 절합하고, 상호적인 관계와 맥락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2-3). 그리고 지역의 사회운동사는 사실규명 작업이 대부분 미진했고, 관련 자료의 확보도 쉽지 않았다.

〈표 3〉 『전남 사회운동사 연구』의 연구 시기와 주제별 분류

시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연구 주제	광주항일학생운동	미군정기 정치지형과 갈등구조
	목포지방 노동운동	해방 직후 전남지역 노동운동
	1930년대 전남지방 농민운동	해방 직후 전남지역 농민운동
		해방 직후 민족교육: 나주민립중학교

1992년에 출간된 『전남 사회운동사 연구』²⁷⁾는 그 동안 진행했던 세

26) 이 책에는 「장흥지역 동학농민운동 관계 구전조사」(송기숙), 「전남지방 농민운동」(이종범), 「장흥에서의 정치투쟁」(정근식)이 수록되었다.

27) 이 책의 표지 상단부에는 작은 글씨로 '역사와 현장 ②'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부정

미나를 바탕으로 한 성과물이었는데, 구성원들이 다루지 못한 주제들은 외부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표 3>과 같이, 이 책에는 7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일제강점기가 3편이었고, 해방 이후가 4편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필진은 현사련의 회원이 아니었다. 해방 이후를 다룬 논문들도 3편만 회원이 집필한 것이었다.

이 책의 주제들은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지역 정치, 민족교육이었다. 3·1운동, 신간회, 그리고 해방 이후의 각종 문화운동 등도 연구될 계획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전남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제들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인식했지만, 역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를테면 20세기 초 근대적 지식인의 형성과정, 일제하 계급적 분화와 민중들의 생활상, 일제하 지역적 통제 메커니즘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집단적 연구 과제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3) 인물에 의거한 근현대 전남지역의 재구성

역사학은 정치사와 사건사에서 사회경제사와 구조사로, 사회사에서 문화사로, 그리고 거시사에서 미시사로 변화했다(김백영·정준영 2016, 30). 그리하여 한국에서도 문화사와 미시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물 연구였다. 인물은 새롭게 조명을 받던 문화사, 지방사, 생활사 등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한 구술사 연구방법론의 강점을 살릴 수 있었다. 인물 연구는 시대를 보다 정치하게 구성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현장감과 실재감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 현사련이 인물에 의거해 근현대 전남지역을 연구하고

기 간행물의 발간을 계속하지 못했던 심리적 압박으로 이해된다.

재구성했던 것도 그런 흐름에 있었다.

근현대 인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초기 연구는 『한국현대인물사론』을 들 수 있다(송건호 1984). 이 책은 근현대 인물 14명을 선별하고, 이들의 삶을 역사의 길, 현실의 길, 그리고 갈지자의 길로 구분했다. 서문에서는 ‘민족해방·민중 지도 노선’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날 이러한 지도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기록했다. 인물에 의거해 근현대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1988년에 재개되었다. 『한겨레』는 창간과 함께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을 연재했는데, 송건호가 『한겨레』의 창간을 이끌고 초대 사장 및 회장을 지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겨레』는 이를 바탕으로 1991년 11월부터 1992년 5월까지 3권의 책을 출간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여기에 수록된 인물들의 대다수는 잊혀진 혹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이념의 잣대를 넘어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주요 인물 군에 포함되면서 망각되고 억압되었던 근현대의 공백들이 채워지거나 수정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일제강점기의 인물을 대상으로 근현대를 재조명하려는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친일 및 반민족행위자들, 분단에 책임이 큰 인물들이 주로 해당되었다. 이를테면 1993년에 3권으로 출간되었던 『친일파 99』과 1994년에 3권으로 출간되었던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대표적이었다(반민족문제연구소 1993; 1994). 전자가 일제강점기의 친일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해방 이후 분단 대결 구도와 반민주적 정치 형태, 그리고 예측 경제 구조를 주도해 온 인물의 사상적 뿌리와 지향을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친일파 죄상기』도 근현대 인물 연구의 흐름에 동참했다(정운현·김학민 엮음 1993).

이러한 흐름은 현사련과 전남지역의 언론사들에 영향을 주었다. 이를테면 광주일보사가 간행하는 월간지 『예향』과 금호문화재단이 간행

하는 월간지 『금호문화』 등에 인물들이 소개 및 연재되고 있었다. 현사련은 전남지역과 연고가 깊은 인물의 발굴 및 정리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때마침 『무등일보』와 인연이 닿아 1993년 6월부터 2년간 근현대 전남지역 인물들을 연재하게 되었다.

근현대 지역 인물 연구는 유족이나 후손 그리고 친족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인물의 평가는 명예 및 선양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뜨거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인물의 선정에서 시시비비가 되지 않을 분명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의 관련자들은 공론화되는 것에 반색했으나,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의 관련자들은 기록이 남는 것을 곤욕스러워했다. 하지만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를 경유하는 동안 일관되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이 때에는 연구자의 판단과 세계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 인물을 선정하고, 이들의 삶을 통해 시대상을 독해하고 재구성하려면 예견이 가능한 여러 문제들과 사회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5. 15, 13; 안종철 외 1995, 5-7).

근현대 인물 연재의 순서는 생몰 년대, 주요 활동 분야, 관련사건, 사회적 평판, 기록물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열되었다. 인물들은 연재가 진행되면서 배제되거나 추가되었다. 인물의 삶과 평가가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량의 원고로 정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연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반드시 고찰되어야 했으나, 연구되지 못한 인물들도 상당수였다. 차후 과제로 미뤘으나,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등일보』에 기사화가 된 뒤에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후손으로부터 수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어쨌든 근현대사 인물 연재는 한 동안 전남지역에서 중요하게 회자되었으며, 많은 후일담을 낳았다.

현사련은 이들 원고를 바탕으로 수정과 보완을 했다. 강조되어야 할 인물의 원고를 확대하는 것, 주요 지점에 각주와 참고문헌을 표기하는 것, 신문에서 수록하지 못한 사진 등을 추가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 현사련은 84명의 인물을 '지역 엘리트'와 '지역 사회운동'으로 각각 42명씩 분류하고, 두 권의 책으로 묶었다. 두 가지 주제로 인물들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최소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2) 근현대 지역연구의 한계

현사련의 근현대 지역연구는 5·18 조사 연구에서 비롯되어 병행되었지만, 5·18에 관한 구술채록이 완료되기 이전부터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²⁸⁾ 근현대 지역연구는 5·18에 관한 조사 연구에 비해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요구되었다. 게다가 본래 추진하려고 했던 연구 주제들에 대한 조사 연구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를 대체할 주제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다. 5·18 구술채록은 1990년 5월에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이 출간되면서 사실상 일단락되었고, 5·18을 주제로 한 집단적인 후속 조사와 연구는 멈추었다. 5·18 조사 연구를 전담했던 팀이 해산한 후, 현사련의 학술활동은 '현대사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세미나가 지속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로 귀결되지 못했다.

현사련의 근현대 지역연구의 한계는 몇 가지 측면들에서 기인했다. 첫째, 현사련이 설립될 당시 표방했던 지식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합의

28) 이는 「송기숙 노트」 35쪽에서 확인된다. 1988년 11월 21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이 '연구소와 연구원·연구위원의 관계'였다. 위의 자료에는 '상호 업무·과제의 불일치·연구소와의 관계 강화에서의 미온성'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정도와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이다. 이사진 경력이나 명망 그리고 활동은 현사련의 지향과 성격을 잘 대변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관심과 공감대를 가졌던 것은 5·18 조사 연구였다. 이사들은 현사련이 주최한 학술 토론회에서 발표와 토론 등의 역할을 맡았다.²⁹⁾ 이러한 활동은 현사련을 알리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지역에 관한 다른 주제의 학술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장벽이 되었다.³⁰⁾

5·18 구술채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진이 현사련의 학술활동에 유기적으로 결합하기가 어려웠다. 즉 5·18 구술채록 이후 과제로 선정된 주제들, 즉 광주학생독립운동³¹⁾이나 일제강점기 전남지역 등은 지역성을 강하게 띠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 곳곳에서 참여한 이사들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했다.

둘째, 현사련이 지식인의 사회참여를 표방한 학술활동에서 차츰 거리를 두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사련은 ‘광주전남의 지역운동 속에서 학술운동의 위상’을 주제로 토론하기도 하고,³²⁾ 이른바 진보적 연구단체들 간의 연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³³⁾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현사련은 서울 등의 유사한 성격의 학술단체들이

29) 현사련은 1989년 4월 28일 전남대에서 “5·18항쟁 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발표자의 3명 가운데 2명이 이사였다. 1990년 5월 30~31일에는 연세대에서 “제2회 광주5·18민중항쟁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6명의 대표 발표자 가운데 3명이 이사였고 1명이 감사였다.

30) 현사련의 정관(1988. 5. 23. 시행) 제2조(목적)와 제3조(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관은 연구대상이 ‘한국현대사’임을 반복해서 명시한 반면, 지역과 관련해서는 ‘호남지방의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는 것만 포함되어 있다.

31) 현사련은 1990년 5월에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 ‘제2차 사업’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5. 15, 11).

32) 이는 1988년 8월 13~14일 열린 수련회의 발표 제목이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88. 9. 24, 24).

33) 1988년 6월 30일 제3차 연구위원 간담회에 한국사회연구소 정윤형 소장이 참석하여 근래 서울 등지의 학술운동을 소개하고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해 8월 23일 제8차 연구위원 간담회에서는 학술단체협의회와의 관계 등이 논의되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88. 9. 24, 23-24; 『송기숙 노트』, 11쪽). 기록상으로는 역사문제연구소와의 교류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주도했던 각종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사련은 비제도권 지역연구 단체의 위상을 고수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학술연구집단의 성격을 갖게 했다. 사회운동의 격랑이 수그러들자, 유사한 시기에 설립되었던 서울의 비제도권 학술단체들은 학회나 전문 학술기관으로 입지와 전망을 선회했지만, 현사련은 비전과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했다.

셋째, 5·18 구술채록을 마무리한 1990년 중반 이후 현사련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는 점이다. 현사련 운영비는 독지가들의 후원에 의존했는데, 5·18 관련 조사연구가 마무리되면서 중단되었다. 소장은 현사련의 운영을 '현대사 팀'에게 일임했고, 이사회는 사실상 활동을 중지했다. 근현대 지역연구로는 후원자가 모집되지 않았다. 지역의 신문들에 글을 연재하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연구비의 난항은 연구자 충원과 참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구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넷째, 지역에 소재한 연구단체가 갖는 자료와 정보 그리고 역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현사련은 부족한 자료와 정보를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확보했고, 기 발행된 책과 논문 등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서울과 지역이라는 간극이 이미 상당했는데, 이를 만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현사련은 일제강점기 전남지역을 연구하기 위해 1990년부터 2여 년 간 세미나를 진행했지만, 신진연구자들을 독립된 연구자로 육성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미나를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몇 편이 생산되었지만, 현사련의 성과로 귀속될 수 없었다. 따라서 오랜 준비 시간과 세미나에 비해 현사련의 학술활동 성과는 빈곤해져갔다.

한편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제약의 영향도 작용했다. 『광주일보』의 “현대사의 재조명”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지 못한 것이 그 예이다. 주요 이유는 현사련에서 게재한 원고를 수정하는 동안 『전남일보』에서 유

사 시기와 주제로 출판했기 때문이었다.³⁴⁾ 1987년에 창간한 『전남일보』는 편집국 산하에 김준태를 위원장으로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를 두고 87회에 걸쳐 “광주전남현대사”를 연재했다. 『전남일보』 연재는 문자 기록보다 관련자와 현지에 대한 증언조사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이종범 1993, 176). 즉 사진, 비공식 문자 자료, 음성 자료 등을 수집했고, 이를 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전남일보』는 1990년 말까지 연재를 마무리하고, 1991년 1월 『광주전남현대사』라는 제목으로 2권의 책을 간행했다.

5. 맺음말

사람은 그 시대를 틀 지우는 구조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은 그러한 구조와 관계를 바꾸려는 노력과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의 현재와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무수한 노력과 힘은 기존 질서에 쉽게 편입되고 희석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 한국으로 보면, 1980년 5월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그러하다. 5·18은 새로운 수많은 사회운동을 태동시켰으며, 한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은 실로 결정적이었다(최장집 2007, 144).

이러한 사회운동의 흐름에는 지식인의 참여와 역할이 있었다. 지식인, 특히 교수와 연구자의 사회참여는 대체로 학술활동을 매개로 전개되었다. 지식인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다른 계층 계급으로 이전하는

³⁴⁾ 두 신문사는 비슷한 시기에 연재를 했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건국준비위원회의 경우, 『광주일보』는 2회 연재로 마무리했지만, 『전남일보』는 전남 지역을 세분하여 19회 연재했다. 집필 시기의 경우 『광주일보』는 여순사건에서 끝났으나, 『전남일보』는 한국전쟁을 포함했다.

경우도 있었지만,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보통 지식이라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8년 5월 현사련이 설립되었던 것은 바로 지식인의 사회참여 일환이었다. 현사련의 설립을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이루어졌던 비제도권 학술단체의 하나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사련의 설립은 다른 유사 사례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5·18의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객관화'와 '공식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의 경력을 갖고 있던 교수와 연구자가 이사진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현사련은 일차적인 설립 목적에 따라 5·18 조사 연구를 진행했지만, 한편으로는 근현대 지역연구도 병행했다. 근현대 지역연구는 5·18의 발생 원인과 성격 그리고 의미와 가치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근현대 지역연구는 이러한 목적과 별도로 한창 성장하던 사회과학 연구의 중요한 줄기였다. 따라서 5·18 조사 연구를 보완하는 역할로 근현대 지역연구를 위치시킬 수만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사련이 보다 장기적으로 학술 활동을 전개했던 주제는 근현대 지역연구였다.

근현대 지역연구를 주제로 한 현사련의 학술활동이 활발했던 시기는 1988~1995년이였다.³⁵⁾ 근현대 지역연구가 현사련의 독점물은 아니었지만, 당시 전남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단성을 유지했고, 가장 많은 성과를 양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사련의 근현대 지역연구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즉 전남지역 해방 전후사의 재조명과 복원, 근현대 지역사회운동사를 주제로 첫 연구서 발간, 그리고 인물에 의거하여 근현대 전남지역을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현사련의 학술

³⁵⁾ 현사련은 1996년 이후 주제에 관한 모임과 연구를 계속했으나, 외화하지는 못했다. 함께 공부했던 주요 주제들은 구술사 방법론, (지방) 선거, 지역사 연구 등이었다.

활동은 지역의 신문사들과 연계 및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고, 회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교수와 연구자가 함께 이룬 성과였다. 교수와 연구자가 비제도권 학술단체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했던 것은 현사련이 근현대 지역연구의 구심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현사련의 근현대 지역연구의 성과들은 오늘날에도 전남지역 연구의 나침판이며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사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했고, 스스로 제시했던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은 현사련이 설립될 당시에 갖던 구조적인 한계들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전국적인 학술단체를 지향했으나, 그것은 5·18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현사련을 설립했던 일차적인 목적이었던 5·18 조사연구가 일단락되자, 그 지지력은 근현대 지역연구로 전환되지 않고 와해되었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비제도권 학술단체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현사련에서 근현대 연구가 이루어졌던 환경은 5·18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상당부분은 별개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현대 지역연구는 이제 대부분 제도권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활성화되었던 근현대 지역연구가 제도권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정착한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연구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가 왜 필요하며, 어떠한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관성적인 틀 내에 머무르는 듯하다. 이와 더불어 집단연구의 학풍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학술활동의 성과가 개인의 실적과 전유물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오늘날, 공동연구가 갖는 진정성과 의미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접수 2018. 10. 21. 심사완료 11. 14. 게재확정 11. 27)

참고문헌

- 『광주일보』 연재, “광주 전남지역의 현대사 재조명.” 1989. 1. 1.-1990. 2. 17.
- 고석규. 1998.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1. 13-40.
- 고석규. 2008. 『지방사란 무엇인가』. 『지방사연구 입문』. 민속원. 11-26.
- 권태억. 1993. 『전남지방 근현대사연구 강평』. 『전남사학』. 7. 185-188.
- 김동춘. 1988. 『한국사회에서의 지식인의 위상과 학술운동』. 『경제와 사회』. 1. 101-130.
- 김동춘. 1989. 『학술운동의 현황과 전망』. 『현상과 인식』. 12(4). 89-106.
- 김백영·정준영. 2016. 『제2장 유럽 사회사 연구의 흐름』. 『사회사/역사사회학』. 다산출판사.
- 김점숙. 1990. 『1930년대 전반기 전남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진. 1986. 『8·15 직후 광주지방에서의 정치투쟁의 전개에 관한 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진. 1987. 『8·15 직후 광주지방에서의 정치투쟁』. 『역사비평』. 1. 99-135.
- 노영기. 2013. 『5·18항쟁의 배경과 참여세력』. 『역사와 현실』. 89. 343-377.
- 반민족문제연구소. 1993. 『친일파 99인 1, 2, 3』. 돌베개.
- 반민족문제연구소. 1994. 『청산하지 못한 역사 1, 2, 3』. 청년사.
- 송건호. 1984. 『한국현대인물사론』. 한길사.
- 송기숙. 1990. 『5월의 꿈 5월의 분노』. 『예향』 5월호. 50-77.
- 신일섭. 2009. 『1978년 “교육지표 사건”의 역사적 의미』. 『박정희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담론』. 엔터. 115-163.
- 안종철. 1991. 『광주 전남 지방현대사 연구 - 건준 및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울.
- 안종철·김 준·정장우·최정기. 1995.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사회운동』. 새길.
- 역사문제연구소. 1993. 『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 II. 호남편』. 여강.
- 유초하. 1989. 『현 단계 한국사회변혁에서의 지식인 운동의 위치와 과제』. 『현

- 상과 인식』. 12-4.
- 이재성. 2005. 『1980년대 대구지역 사회운동의 한 방향 : 『지방사회연구』의 학술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3(2). 1-25.
- 이종범. 1993. 『전남지방 근현대사 연구』. 『전남사학』. 7. 153-184.
- 이종범. 2004. 『'5.18항쟁' 증언에 나타난 '기층민중'의 경험과 생활』. 『한국근현대사연구』. 29. 204-239.
-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1996.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대학교 출판부.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 『박정희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담론』. 엔터.
-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1988.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집』. 광주.
- 정근식. 1996. 『지역 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연구방법론의 모색』. 전남대학교 출판부. 117-148.
- 정근식. 2017. 『6월항쟁 연구의 흐름과 재해석』. 『6월민주항쟁 전개와 의의』. 한울. 490-526.
- 정근식·김민영·김철홍·정호기. 1995.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 새길.
- 정운현·김학민 엮음. 1993. 『친일파 죄상기』. 학민사.
- 최장집. 2007.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연구』. 128. 144-184.
- 최장집 편. 1985. 『한국현대사 I』. 열음사.
- 최정기. 2004. 『5월운동과 지역권력구조의 변화』. 『지역사회연구』. 12(2). 1-19.
- 최정기. 2018. 『5·18 국가폭력 및 항쟁과 구술조사 - 증언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 『민주주의와 인권』. 18(2). 79-107.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 편집부. 1991.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1』. 한겨레신문사.
- 편집부. 1992a.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2』. 한겨레신문사.
- 편집부. 1992b.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3』. 한겨레신문사.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88. 6. 15. 『현대사 자료연구 1』.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88. 9. 24. 『현대사 사료연구 2』.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5. 15. 『현대사 사료연구 3』.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a. 『역사와 현장 1』. 남풍.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b. 『광주5월민중항쟁자료전집』. 풀빛.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지음. 1992. 『전남 사회운동사 연구』. 한울.
- 한길사. 1983. 『한국사회연구 1』. 한길사.
- 허 은. 2003. 『1980~1990년대 교수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허 은. 2010. 『제1장 신군부의 등장과 '서울의 봄』.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37-35.
- 황남준. 1987. 『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413-494
-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1991. 『광주전남현대사 1, 2』. 실천문학사.
- Meade, E. Grant. 1951.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안종철 역. 1993. 『주한미군정 연구』. 공동체.

Influences and Limitations of Social Movement on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Studies
-Focused on the Academic Activities of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

Jung, Ho Gi

Korea was a continuation of turmoil throughout society in the 1980s. The main force in these times was the social movement. Intellectuals also played a role in the social movement based on academic activ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social movements on intellectuals' academic activities. The spatial background is Jeonnam province and Gwangju, and the subject was academic activities of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 is a non-institutional academic organization established in Gwangju with a heritage of 5-18. The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 prioritized survey and research on 5-18, but in parallel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studies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the 5-18 research. However, the study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studies soon became an independent subject. Since the mid 1990s, studi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studies has become the main theme in academic activity, and has produced the largest achievements. Achievements are organized into 3 categories. 1) Reconsideration and restoration of history before and after liberation of Jeonnam, 2) First publication of the research report on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movement history of Jeonnam, 3) Modern and

contemporary reconstruction of Jeonnam area based on personage. However, the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 didn't overcome structural problem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local non-institutional academic organization.

Key-word: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studies, Social movement, May 18 democratic uprising, Community involvement of local residents,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